사라진 아이는 어디에…부실수사에 5년째 행방 묘연

목포경찰, 2016년 2세 아이 실종 수사
"당시 신원불상자에게 아이 넘겼다"는
부모 말만 듣고 제대로 수사 않고 종료
당연히 해야 할 '실종 아동등록'도 안해

아동법 위반 부모는 2017년 집유 선고
무관심 속 5년간 위치·생사 파악 안돼
올해 취학 대상인데 여전히 소재 불명
뒤늦게 재수사 시작…아이 반드시 찾아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 아이는 5년 전 사라졌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경찰도 5년 전, 당시 13개월된 남자 아이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종아동'으로 등록해 추적하거나 아동 관련 시설을 통한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특히 실종 아동의 부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작 실종 아동 수사에는 소홀해 피해 아동의 생사나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5년이나 지난 뒤에 다시 행적 파악에 나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2016년 2월 목포에서 실종된 남자아이 A(2014년 12월 출생)군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A군의 행적을 찾아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5년 전 A군의 실종 수사를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데다, 당시에도 행적을 좇다가 흐지부지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군 부모의 유기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 재판에 넘겼고 A군 아버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모친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A군 부모를 처벌하는데만 치중하면서 피해 아동의 행적을 찾는데는 미온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면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A군을 자체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실종아동'으로 등록하지 않아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지적장애아·채매 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실종아동'으로 등록하는데,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관할 경찰서가 1년 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경우 전남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계속되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관심 때문에 A군에 대한 추적은 5년간 멈춰졌다는 얘기다. 경찰은 아동 복지시설을 통한 A군 행적 파악에도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처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울고 토하는 등 힘들게 해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에게 인도했다"는 부모 진술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부모의 차량이동내역, 통신내역, 발신 기지국 인근 CCTV, 배 탑승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아이의 행적을 찾는데 노력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아동보호시설 등을 탐문, 부모 인적사항을 토대로 비교·대조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실종 아동 전단지 제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터넷으로 입양 보냈다는 부모 말만 믿고 실종 수사를 종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사기록을 목포경찰에서 넘겨받아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 시스템에 아동 실종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교통문화지수 급락 왜?

시민 의식·지자체 정책 느슨 탓…2위→30위로

광주시 서구의 교통문화지수가 '급락'했다. 전년도만 해도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는 30위까지 '추락'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 뿐 아니라 지자체의 교통안전정책도 느슨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82.02점을 기록했다.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C등급(중위 30%)으로, 전년도 A 등급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것이다.

광주시 북구(85.89점·A등급)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3위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상위 10%)을 받았다. 남구(84.09점), 광산구(82.95점), 동구(82.79점)는 B등급(상위 25%)이었다.

서구의 교통문화지수 추락은 기본적인 교통안전 지표가 낮아진 게 원인이다.

특히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율·안전띠 착용율·스마트폰 사용 금지 준수율 등이 낮아졌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설명이다.

안전띠 착용률은 2019년(93%)보다 급감, 80.2%에 불과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여부의 경우 조사대상 차량 457대 중 83대가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아 준수율(81.84%)이 2019년(83.44%)보다 낮아졌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2019년 35%에서 2020년 40.57%로 오히려 늘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의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5.1점)보다 하락한 2.9점을 기록했고 지자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수준도 1.92점에서 0.6점으로 떨어졌다.

김태진 서구의회 의원은 "서구의 교통안전지수가 낮아진 데는 교통안전 정책과 노력이 전년도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느슨해진 교통 행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망 사고' 광주글로벌모터스 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불법하도급 조사해야"

노동단체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산재 사망 사고, 다단계하도급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가 아닌 '죽음의 공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청은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망사고로 작업이 중단된 뒤 해당업체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다"며 "심지어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허석 순천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혐의

검찰이 허석 순천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양심 불량' 정육업자들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2명 입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양심 불량' 정육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1일 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지역 식육 판매업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정육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39)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산 소고기 목심 3500㎏을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속여 5442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양념육에 '국내산 한우'라 쓰인 라벨지를 붙여 온라인 판매하거나 마트에 납품해왔다.

포장육 1개당(350~400g) 원가는 7000원 정도였으나 시중에서는 1만5000원에 팔며 값을 2배 높였다. 판매된 포장육은 총 7000개 정도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1995만원에 이른다.

농관원은 A씨가 지난해 한우 값이 20~30%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량 납품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우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식·모임이 제한된 뒤에도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7월 한우 등심(1㎏)이 전년(7만9000원)보다 29.1%(2만3000원)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됐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당시 '집콕' 생활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한 번 먹을 때 좋은 것을 먹자'는 심리 등이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했었다.

광주시 남구 한 식자재마트에 입점한 정육점 대표 B(38)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호주산 소고기 설도 72㎏을 '한우 양념 소불고기' 등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호주산 원가는 39만5000원 정도로, 8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한편, 전남농관원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거짓 표시 58건·미표시 22건 등 총 80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1627	1	북구 안산로47-4, 4층 401호 [오치동,오치동도나우아파트] 48.6207㎡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20타경 11962	1	북구 두암동 825-1 5층 503호 70.64㎡	아파트	63,000,000 63,000,000	
2020타경 12187	1	광산구 풍영로63, 916동 9층 904호 [월곡동,영천마을주공아파트] 84.75㎡	아파트	223,000,000 223,000,000	
2020타경 74185	1	동구 남문로693번길11, 203동 11층 1104호 [학동,학2마을아파트] 84.96㎡	아파트	338,000,000 338,000,000	
2020타경 74529	1	남구 회재로1178, 1동 12층 1202호 84.87㎡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72974	1	남구 주월동 490-9 177㎡	대	301,248,000 301,248,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4-2 1층85.37㎡ 2층 54.54㎡ 부속건물 변소 1㎡ 제시외 창고 등 44.8㎡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0853	1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산13-2 13587㎡[공유자정승권,김사랑각지분1/28전부.분묘소재]	임야	2,135,100 2,135,1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11771	1	장성군 북하면 대흥리 398 1478㎡	답	205,288,000 205,288,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399 995㎡	전		
2020타경 12279	1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775-1 893㎡[연고미상분묘소재[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전	365,939,000 365,939,000	일괄매각.목록1,2,5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지상소재비닐하우스1동매각제외
		동소 775-2 2281㎡	전		
		동소 775-3 9776㎡	임야		
		동소 775-5 1722㎡	전		
2020타경 12279	2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775-4 602㎡	전	36,199,000 36,199,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8지상소재비닐하우스1동제외
		동소 751-5 218㎡	전		
		동소 756-2 132㎡	전		
		동소 757-1 351㎡	전		
2020타경 71636	1	광산구 송치동 440 559㎡	대	27,733,510 27,733,510	일괄매각.2020타경12361[중복].2020타경12569[병합]
		동소 454-1 159㎡[물건번호1:공유자김선경지분2/11전부.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대		
2020타경 72844	1	곡성군 입면 삼오리 50 185㎡ 제시외 감나무 외 2주[제시외수목포함.인접필지[삼오리49]와경계구분없이일단으로이용중]	대	8,845,000 8,845,000	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11009	1	나주시 상야2길7, 8층 비901호 [빛가람동,중흥에스-클래스메가티움1차] 38.9059㎡	근린시설	107,000,000 107,000,000	
2020타경 11863	1	북구 서암대로315번길20-7, 202호 [우산동,주건축물제1동] 52.14㎡	근린시설	150,000,000 150,000,000	
[자동차,중기]					
2020타경 75805	1	사용본거지:광주 중구 퇴계로90길 74, 108동 1302호[신당동,래미안신당하이베르아파트] 등록번호:54구2115 차명:QM5 연식:2014[총주행거리는기계장치미작동으로인해계기판상,모니터차계부상에서확인되지않으며자동차등록원부상2019.7.29.자동차검사일 초일당시의주행거리는117,824㎞임]	자동차	7,500,000 7,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3 송암주차장
[기타]					
2020타경 71636	2	광산구 송치동 451-2 33㎡[공유자김선경지분2/1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도로	636,000 636,000	2020타경12361[중복],2020타경12569[병합]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2. 16.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2. 23.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